

정부의 컴퓨터2000년문제 대책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추진 단계별 대응 기한을 설정하고 각급기관에 대한 추진 진도 평가와 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물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관련법령도 제정할 계획으로.....

신 순 식 /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서기관

범정부차원의 대책수립 · 추진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현안과제이다. '99년말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의 상당부분을 정보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조세, 주민등록업무, 부동산관리, 금융, 통신 등 공공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야기되는 등 국가사회 전체의 정보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또, 시간제어기능이 있는 부품이나 운영 S/W를 내장한 각종제어시스템 및 산업자동화설비 등의 경우에도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97.2월부터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세미나,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대기업, 금융기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과 6월에 컴퓨터2000년문제 종합대책(Ⅰ)과(Ⅱ)를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Ⅰ)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 추진체계의 정립

'98.4월 범정부차원의 2000년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컴퓨터2000년문제 대책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 한정길 경제행정조정관)를 설치하였다. 대책협의회에서는

부문별 2000년문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애로 타개책 등 지원방안 및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국가사회 전반의 추진실태를 관리하고, 한국전산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통해 기술자문·지도 등 2000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태를 관리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토록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관련정부기관, 중소기업관련 단체,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편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소관 중점관리대상분야의 추진상황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98.4.3부터 5.14일까지 70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현황 및 추진실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H/W의 21.0%, S/W의 26.7%가 변환이 필요하며 H/W중에서는 주전산기(46.4%),

S/W중에서는 응용S/W(54.7%)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조사대상기관의 14.9%(105개)만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문제해결추진이 늦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공부문 정보시스템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대 중점관리대상분야의 선정·관리

컴퓨터 2000문제 발생시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문제해결능력이 취약한 지방행정, 금융, 원전, 전력(발전 및 송.배전) 및 에너지(가스.송유), 통신, 운송, 항만, 의료, 중소기업, 산업자동화설비 등 10개분야를 『중점관리대상분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98. 4. 20부터 5. 9까지는 10대분야중 원전, 항만, 지방행정을 제외한 7개분야 11개 기관에 대하여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진단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자동제어설비, 산업자동화설비 등 비정보시스템이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고 있음.

○ 특히,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외산 장비의 경우에는 제작사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부족으로 시스템현황조차 파악하지 아니한 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교육기관	기 타	계
대상기관	44	248	293	73	45	703
해결기관	11 (25%)	0 (0%)	44 (15%)	48 (65.7%)	2 (4.4%)	105 (14.9%)
미해결기관	33 (75%)	248 (100%)	249 (85%)	25 (34.3%)	43 (95.6%)	598 (85.1%)

관도 있었음.

(2) 컴퓨터 2000년문제를 『경영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내부 전산요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하고

○ 제한된 기간내에 대규모의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정관리계획도 미흡함.

○ 한편 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재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

(3) 컴퓨터 2000년문제는 개별기관이 해결 주체이나, 정부 또는 특정 정부부처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4)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영향평가와 검증이 가장 중요하나, 변환작업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있음.

(5)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전 기관이 '99년 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아니함.

■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체제 구축

'98.4월 한국전산원에 『기술자문단』을 설치하여 문제진단, 해결방안 등을 자문하고 기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실직자들에게 2000년문제 관련 재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기술인력 Pool』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성하고 있다.

■ 컴퓨터 2000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98.4월부

터 6월까지 광주(4.24), 대구(5.20), 울산(5.22), 대전(5.26), 춘천(5.28), 서울(6.1)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2000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한편 2000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주요 일간신문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컴퓨터2000년문제 종합대책(II)

《 추진배경》

지난 3월 범정부차원의 『컴퓨터2000년문제 종합대책(I)』을 수립.발표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인식은 대폭 확산되었으나,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인식단계 또는 영향평가단계에 있는 등 대응정도가 아직은 미흡하고 특히 비정보시스템이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대응이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의 기업, 은행 등이 2000년문제의 해결추진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수출상담과정에서도 제품의 2000년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으며,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금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2000년문제 대응상황을 신용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문제에 대한 대응이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체계에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 수출증대, 국가신용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보다 강력하게 추

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Ⅱ)를 작성하여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보고하여 확정 발표하였다.

■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기한 설정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 단계별 대응기한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영향평가	변 환	검 증	시험운영
'98. 8월 완료	'99. 2월 완료	'99. 4월 완료	'99. 8월 완료

앞으로 정부는 위 일정을 각급기관의 추진계획수립, 문제해결 추진활동 및 진도관리를 위한 기준일정으로 활용하고, 추진단계별 점검사항, 비상계획 작성처리지침 등 각급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 2000년문제해결 추진진도 평가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진도를 격월로 평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각 부처로부터 평가대상 전월의 추진진도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대책협의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초에 세부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난 4~5월 실태자료를 검증하여 추진실태자료를 DB화할 계획이다.

10대 중점관리분야 및 정부산하기관의 추진진도도 소관부처별로 상기요령에 의해 평가·관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부처의 평가·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실업대책차원에서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99년말까지 약 415,200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할 것

이나, 가용전문인력은 398,900명에 불과하여 약 17,2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족인력 17,200명중 12,200명은 실직자 재취업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인력 5,000명은 Tool활용교육 등 재직자훈련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해결할 계획이다. 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인력Pool』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정보기술교육원, 민간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800명을 양성하며, 대학,전문대학 등 학교시설을 이용, 2000년문제 관련과정을 통해 6,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2000년문제의 해결을 유도.지원

2000년문제의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98년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2000년문제 해결제품의 구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연도표기 관련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99년부터는 2000년문제 대응실태를 고려하여 정부의 각종보조금, 연구개발비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00년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재무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이 대출시 차주기업의 2000년문제 대응상황을 신용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보험약관에 2000년문제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을 반영하며,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공시시 2000년문제 추진상황의 공시를 권고할 계획이다. 2000년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중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문제해결센터』를 설치하여 2000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 수요기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업체를 알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 지자체를 선정하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추진방법, 결과 등을 다른 지자체에 파급할 계획이며, 정부기관 및 10대 중점관리분야의 문제해결 방법을 자문하고 추진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에 분야별 2~3명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기술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현황 및 향후 남은 문제해결 기간을 고려할 때, 전 기관이 자체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기관이 외부전문기관 및 톨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를 위해서 이의 선정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비정보시스템 분야의 문제해결촉진 및 중소기업지원

비정보시스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업종별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비정보시스템의 2000년문제 관련자료를 수집, DB화 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등 시스템 종류별로 문제발생 유형,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고 외산 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부간 회담, 국제기구회의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선진국의 문제해결지원을 추구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비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제작사에게 문제발생 유무 및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유도하며,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을 전담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2000년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중에 업종별로 20개 시범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문제해결 톨(Tool)업체의 지원을 받아 무료진단을 실시하며, 금년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기술인력 POOL을 활용하여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99년에 2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98년동안 S/W기술개발자금 및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서 300억을 제3차 계약방식으로 용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00년 문제해결 추진상황의 해외홍보활동 강화

해외홍보를 위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및 10대 중점관리분야의 중심추진기관에서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0년문제란』을 신설하여 소관추진상황, 정부종합대책, 후속시행계획, 각종 지침, 홈페이지 구축기관의 웹사이트 주소 등을 영문으로 게재하고 관련 외국,국제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OECD, BIS,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 국제기구의 세미나 및 연구활동에도 소관기관별로 적극 참여하며, 미국의 뉴욕결제원이 '99년에 추진하는 『전세계 금융망테스트계획』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2000년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2000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근거로 '98.7월까지 컴퓨터 2000년문제 관련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령은 추진체계, 정부기관별 역할분담, 추진진도관리, 기타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게 된다.

한편 2000년문제관련 연도코드 표준을 7월중에 확정하여 공표함으로써 각 분야의 2000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